

# 광주시의원들 상임위 “구설에 오를라”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의회에 입성한 제8대 광주시의원들이 주요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구설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한 자기검열에 나섰다. 겸직과 영리행위 업무 연관성에 대한 일종의 주변 정리로, 스스로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공인으로서의 당연한 ‘공적 단속’이고 의원 행동강령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광주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8대 의회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4년 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2년을 이끌 의장과 부의장 2명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문화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3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회운영위원회 선임이 이뤄지고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완료되는데로 16일부터 상임위원별로 민선7기 광주시 실·국별 업무보고를 취할 예정이다. 3차 본회의가 열리는 19일에는 의회운영위

## “배우자가 공무원, NO 행자위”, 겸직도 사퇴 학원-환경업체 폐업 후 교문위, 환복위 희망 “전문성-직업선택 제약 vs 특혜시비 등 차단”

원장을, 4차 본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을 뽑은 뒤 15일 간의 입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는 각각 3명과 5명이 출마한 상태고 4개 상임위에는 적게는 3명, 많게는 8명이 지원했다.

행자위는 3명, 환복위는 5명, 산건위는 7명, 교문위는 8명이 1순위로 지원했다. 2순위 지망은 교문위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행자위 5명, 산건위 3명, 환복위 1명 순이다. 교문위가 단연 인기다. 23명의 재직의원 중 초선이 20명에 이른 가운데 4개 상임위 중 초선이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무난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기검열과 주변 정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배우자가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A의원과 B의원은 1순위, 2순위 모두 행자위를 피해 타 상임위를 원했다. 공직자 인사와 조직관리 총괄부서를 감시하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불필요할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문위원장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 C의원은 학원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로 운영하던 학원사업을 최근 폐업하는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던 D의원 역시 관련 업체를 폐업한 뒤 환복위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의원은 배우자가 문화 관련 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해 교문위를 피해 환복위와 행자위에 뜻을 두고 있고, 여성경제인이자 도시디자인 전문가인 F의원은 전문 분야인 산건

위를 피해 교문위를 희망하고 있다. 공학박사이자 교통기술사인 G의원은 겸직 논란을 미리 불식시키기 위해 광주 도시철도공사 비상임이사를 그만뒀고, H의원도 공공적 단체의 보직을 사퇴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의원행동강령 등에 규정된 겸직과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 직무연관성 등을 두루 감안한 긍정적 자기검열이라는 의견과 전문성과 직업자유성 침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짜이나 초선이 많아 시장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미리 차단하고, 배우자의 직업선택 자유까지도 위축시키는 게 타당할 일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지만, 의원들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직무관련성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질 등의 부작용 차단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 ‘뜨거운 감자’ 난민 문제, 정치권은 아직 ‘갈팡질팡’

여야 “상황 지켜보겠다” 입장만... ‘역풍 맞을라’ 눈치

‘난민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작 정치권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간 현안보다 적극 나서 당의 입장을 밝힌 정치권이지만, 난민 문제의 경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슈인 데다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센 만큼 눈치보기만 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식 논평을 자제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과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민 문제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난민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원칙과 방법을 요청한 바 있지만, 당 차원의 입장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불리 당의 입장을 내놓을 경우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의 입장 정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난민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한국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에 공을 넘겼다. 당 차원의 논평은 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도 관련 입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내부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당장은 정부의 대처 방안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정한 게 없어 공식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면서 “다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입장 정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로 정치권이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사이, 난민 관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6일 역대 최다 참여 인원인 63만명의 추천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난민 관련 법안 발의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권철승 민주당 의원이 최근 난민 심사 전반에 걸친 기준을 적용하는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도다. 이마저도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실성과 당위성의 충돌로 인해 정치권이 난민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논쟁에 잘못 밀려들 경우 ‘뿔이 부스럼’이 될 수 있는 만큼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난민 문제는 진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아젠다인데 이를 애기하는 정당은 한 곳도 없다”며 “결국 우리나라 정당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의 진보는 없고 표(票)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앞두고 잇따라 신경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워크숍 장면. 왼쪽부터 김광수, 김중희, 유성엽, 천정배, 박주현, 장정숙 의원, 조배숙 대표, 장병관 원내대표, 황주홍 의원, 배준현 최고위원, 정인화, 정동영, 윤영일, 최경환 의원.

### 정동영과 유성엽·이용주·최경환 간 입장 충돌 계속

민주평화당이 오는 8월5일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당권주자 세력 간 팽팽한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8일 기준 평화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의원은 유성엽, 이용주, 정동영, 최경환 의원

등인데 경선 물 조정 단계에서부터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첫번째 충돌은 6·13 지방선거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평화당의 운영방식이 원인이 됐다. 현 지도부에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헌당규 상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르자는 주장이었으나 결국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두번째 충돌은 박지원 의원과 정동영 의원 간에 벌어졌다. 박 의원은 이번 조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지원·정동영·천정배·조배숙 등은 일선에서 물러나 지원하고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

내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 의원은 창당 초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보다는 경륜을 갖춘 중진 의원이 나서 중심을 잡아나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1인 1표제로 하느냐 1인 2표제로 하느냐를 두고도 충돌이 벌어졌다. 1인1표제 주장은 당원 표심을 명확히 반영하기가 용이한데다 후보 간 표 거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 선출하는 방식에서는 1인 2표제가 불문율처럼 적용돼왔고 1인 1표제는 특정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의 분란 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준위는 1인 1표제를 채택해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을 올렸으나 최고위원회에서는 1인 2표제 도입을 결정했다.

가장 최근에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자는 입장과 반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지난 5일 전준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지만 양측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내지 못했다.

결과 평화당 전준위는 9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